

문화산책

백승현

대동문화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한 축서는 호남의 역사적 맥락을 꿰뚫고 있어서 가슴 시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 올린했다”며 “수도권과 영남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소외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삼성·SK하이닉스 등 대기업 호남 유치는 향후 광주 전남의 20년~30년 후의 성장 동력을 점화시키는 국정 과제다. 이 대통령은 “호남 투자가 800조원 규모로 크지만 역사적으로 쌓인 누적 투자 격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며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서남권이 주도하는 혁신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켜 전세계가 필요 하고, 그러면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혁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이정표를 호남에 세우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7월 1일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거대한 닳을 올렸다. 정부가 우리 지역에 안겨준 ‘서남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시대적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안아 들여야 할까. 대통령의 의지는 당당하고 확실하지만, 기업들은 호남 투자에 대해서는 입지와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반도체 팸을 넘어 문화서사의 숲 도시로

모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 미심쩍다.

첫째, 공간의 성격을 '반도체 팸 지대'에서 '문화적 정주 공간'으로 재정정의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 구역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 고유의 문화 예술이 융합된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인제가 머물고 싶어 하는 토양을 위해 교육 정책과 체계에 비대한 특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자본도 그 위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첨단 AI 기술자의 주거 도시'를 넘어 '첨단 지식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살·심·꿈'이 통합된 창의 클러스터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전남광주의 역사적 DNA를 반도체의 기술 문화와 결합한 새로운 생활미학적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기술과 예술이 교차하는 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형 문화주권을 위해 시민 펀드와 시민 창작 플랫폼, 시민 생활문화 네트워크 크가 마을과 동네마다 촘촘히 뿌리내려야 한다. 행정과 예술, 자본의 언어를 번역해 줄 전문가 그룹을 집중 육성해 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해야 한다.

둘째, 기업이 도망칠 수 없는 '불가역성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자본은 언제나 이익을 좇아 흐르며, 업황이 꺾이면 가장 먼저 지방의 투자 계획부터 거둬들이 준비를 한다. 따라서 지역 대학의 교육 과정을 반도체 현장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해 기업이 당장 쓸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물과 전력, 송전시설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완벽해 기업이 투자를 미룰 '핑거거리'를 사전에 인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정권 교체 때마다 대형 국책 사업이 표류하거나 백지화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 사업

이 이러한 '5년 주기 정치 리스크'를 돌파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흥배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닳을 내려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다. 예산 배정과 인프라 구축의 법적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5·18의 헌법 전문 수목을 비롯한 안전하고 실효적인 역사적 재평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과 시민연대를 통한 정치적 백지화에 대한 저항, 미완의 빛가람혁신도시 구축 등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성패의 경험을 충분히 해왔다.

넷째, 사업의 주도권을 중앙 정부의 특정 부처에만 맡겨두는 것은 위험하다. 중앙 정부, 지자체, 참여 기업,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가 동등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자산화'와 '시민 의제화'다. 정치권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민의 일상과 연대다. 지역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일자리이자, 지역 문화 생태계를 고도화할 핵심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각인시켜야 한다.

자본의 논리를 꿰뚫어 보고, 문화적 매력과 치밀한 인프라로 무장하여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전남광주통합시가 필사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라는 통합특별시의 '사즉생' 정신이 지금 필요하고, 제2의 '약무호남시무국가'의 비전을 당장 실천할 때다.

새로운 시대가 개막돼 이런 희망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자체로 우리 행복하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억눌리고 제지당하고 굴복하면서 억울함과 소외감과 열패감을 감내해야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의 신호가 더 기쁘고 반갑다.

기고

임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제10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맥을 같이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으며 이후 1987년 민주주의 결실을 바탕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과연 주민의 신뢰를 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이다. 의회의 모든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 역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미래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허부조직으로 바라보는 정치문화가 남아 있고, 지역 현안보다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제10대 지방의회에 바란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주민은 지방의원에 게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책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럼에도 감시해야 할 대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비판 기능을 포기하는 모습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3.0%에 그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 도덕성 문제, 부실한 견제 기능과 통제장치의 미흡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63.5%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이 지방의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지방의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행히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하지만 조직과 예산의 자율성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적 변화가 주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스스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주민들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하는지, 조례안과 예산

안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하는지, 정책 대안을 얼마나 충실히 제시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감,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민주주의의 장이다. 따라서 의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 권력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의회는 주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제10대 의회는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경쟁에 나서며, 어르신·청년·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야 한다. 또한 정정보다 협치를, 보여주기보다 성과를,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주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머리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심 어린 의정활동이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주민의 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때 지방의원은 가장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민들은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제10대 의회는 그동안 제기돼 온 '거수기 의회',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오명을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취재수첩

통합특별시 민형보호에 거는 기대

이승홍 경제부 부장



800조원. 숫자만 놓고 보면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호남에는 단순한 투자 규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지금,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남광주를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 후보지로 제시하며 메모리 팸(제조공장) 구축

구상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공장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축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의 사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어느 지역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달라진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첨단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산업 재편의 흐름 속에서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통합의 의미는 행정구역의 하나로 묶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광주의 AI와 미래모빌리티, 전남의 에너지와 산업 기반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있다. 국가 전략 산업을 끌어들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다면 통합은 행정 효율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논의가 힘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연구개발 인프라, 우수한 인재, 협력기업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경쟁력이 생긴다. 전남광주가 지역별 강점을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엮어낸다면 이번 산업 재편은 좀처럼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시선은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인 민형배 시장에게 향한다. 통합을 이뤘다는 상징성만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채울 수는 없다. 국가 전략사업을 끌어들여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며, 통합의 시너지를 일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산업 경쟁의 시대다. 산업의 흐름을 읽고 기회로 바꾸는 지역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낸다면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다.

사설

민선 9기 본격화...지자체장 초심 결실 맺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1일, 통합특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이 가장 먼저 결정한 업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향후 4년간 시·구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첫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먼저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민생 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을 제1호로 결재했다.

시민들이 행정통합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시민 체감형 통합 민생 지원과 행정 혼선을 방지하는 제도·행정 체계 정비, 그리고 첨단산업 전력공급 통합 운영 체계 구축 등 성장·균형 통합 실행력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 재난재해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제1호 업무 지시도 내려 앞으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의 안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현했다.

임택 대구구청장은 첫 결재로 'AI 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중장기 계획'과 'AI 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위원회 구성안'을 동시에 승인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 인프라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AI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선 8기 호평을 받은 원원국시, 원원택시 등으로 대변되는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에 바탕을 둔 '착한도시 서구'의 시·군 2를 위해 구청장 직속 기구인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100' 구성·운영 계획을 첫 결재했다고 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노령층이 많은 지역사정을 고려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인 '하반기 효자행동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지난해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고려해 '수해 취약지역 예방 종합계획'을 결재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기존 전문가 중심 행정을 주민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다.

이들 단체장의 첫 결재는 앞으로 특별시장과 자치구 구정이 어디에 집중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언이자 청사진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새 행정환경속에서 민선 9기를 시작하는 이들의 초심이 끝까지 유지돼 결실을 맺길 바란다.

진도 글로벌 김 클러스터 조성 차질없어야

진도군의 글로벌 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된 때 따른 것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돕기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글로벌 김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본 820억원 등 모두 1011억원을 투입해 진도군 군내농공단지 27만9112㎡ 부지에 김 종자 연구개발부터 생산과 가공, 수출 기능을 집적하는 사업을 말한다. K-푸드 대표 수출 품목인 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정으로 진도군은 김 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 완료후에는 임주기업에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행정·제도적 지원이 제공돼 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사실 진도군은 현재 1만6043ha규모의 김 양식장과 20만3147척의 양식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대 김 생산지이다.

물길 위판액은 지난해(2490억원)에 이어 올해도 2474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2400억원대를 보였고 마른길 가공 분야도 지난해와 올해 1900억원 규모의 생산액을 나타내며 김 산업 전체 생산 규모가 2년 연속 4500억원대를 유지할 정도다.

특히 양식장 주변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연중 직조현상이 드물어 진도김은 품질과 품미가 안정적이고 요오드·칼슘·마그네슘 등 미네랄도 풍부하다. 진도에서 유통·판매되는 조미김, 특히 곱창조미김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2024년에는 해양수산부 '김 산업 진흥구역 사업 대상지'로 국비·지방비 등 50억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해수부 '2026년 친환경 양식사업 육성사업'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분야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54억원을 확보해 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왔다고 한다.

진도 글로벌 김 클러스터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돼 전국 최고 김 생산지의 위상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대표전화 (062) 370-70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팩스 (062) 385-54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서 울 지 사 0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